의료계의 Dream Team은 없는가?

글 · 나 종 득
한일병원장
본회 학술이사

지난해 12월 19일에 치러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과거의 대선 공략 쟁점이 민주화, 산업화, 친일척결 등 정치적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 대선은 경제 살리기와 더불어 국민의 보건복지 정책이 쟁점으로 부각될 만큼 사회복지 분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따라서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기존에 추진되었던 보건의료정책과 제도도 대폭적인 변화와 수정이 예상되며, 의료계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크지 않나 싶다.

2월 25일 출범한 새로운 정부는 기존의 정부와 사회복지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기존의 정부는 "획일적 배급형 복지"를 표방했지만 새로운 정부는 보편적, 예방적, 맞춤형 복지로서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희망 디딤돌을 놓아주는 정부"라는 복지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요약해보면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최고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안전 사회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가능성을 인정하는 등 시장지향적인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의료산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적인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겠다 한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복지 정책이 이슈인 지금 우리의 관심은 온통 "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행보에 있다.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면 개혁이라는 명분아래 그 전 정부가 시행하거나 도입 검토 중인 의료계 현안들은 사장 되거나 가속도가 붙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것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여론에 밀려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는 많은 단체들의 이해가 서로 얽혀있고 그 얽혀 있는 매듭을 푸는 것이 바로 지금 "인수위"의 역할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인수위"에서 결정을 내리는 의료계 현황 사항들이 앞으로 한국 의료계를 5년동안 이끌어나갈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바로 지금의 "인수위"의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의료계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다면 한국 의료계는 한층 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많은 정부가 수립되었고 그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에 맞게끔 정책이 세워지고 추진되어 왔다. 새롭게 도입된 정책들은 수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왔으며 이는 의료계 발전의 기틀이 되어 왔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이 있었으며 그 결과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였고 현재에도 모순된 제도를 안고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보건의료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지지 못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는데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의료계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다면 한국 의료계는 한층 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과들과 그 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기관, 단체, 그리고 그 정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단순히 의료 선진국이라 불리는 다른 나라의 정책을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적당히 손질하여 장미빛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인수위"의 사회 · 교육 · 문화 분과위에서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는 한 두명 정도뿐이고 나머지는 이 분야의 전문가라 부르기에는 다소 미흡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 있는 정책이 나올지 우려된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전문성이 필요한 의료계 정책들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이 발표되고 이러한 정책들은 5년동안 그 시행을 두고 이해 단체들의 각종 로비와 반대로 탁상 공론에 머물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다음 정부로 그 짐을 떠넘기고 차기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흐지부지 되어버리기도 한다. 이제라도 보건 의료계의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켜 올바르고 실현 가능한 정책들로 수정 · 보완되기를 기대해본다.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의 의료정책 또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하느냐에 향후 5년이 다르게 평가되겠지만 현재 차기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보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닐 듯 느껴진다.

물론 발표된 정책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이고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새로운 의료정책은 의료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해야 하며 의료계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는 의료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예산을 10% 가량 삭감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전 정부에서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지도 의문시된다. 물론 새 정부가 경제 발전을 통한 이익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배분하여 사회복지분야에도 적극 투자한다고는 하지만 건강보험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매년 막대한 비용의 재정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면 의료계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험수가를 인상하여 재정적 적자를 해결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고스란히 의료계의 부담으로 남아 의료계는 계속되는 경영난에 노출될 것이기에 의약분업 등에 대한 재검토 등 건강보험의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눈높이 또한 과거에 비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될 수 있으면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는 "의료쇼핑"이 보편화된 시점에 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의료 서비스 개선은 중소병원의 입장에서는 당장 시급한 문제이지만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의료 쇼핑"은 중소병원이 대형병원을 가기위해 어쩔수 없이 거쳐야만 하는 정류장의 처지에 놓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의료의 질 높이기와 의료 서비스 개선이라는 명분아래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의 기준을 병 · 의원에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병 · 의원의 재정수준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병 · 의원들을 압박하여 경영난 뿐만 아니라 간호사 인력난 등 많은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개선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이지만 모든 국민과 수많은 질병들을 고려한다면 의료 전달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을 좇아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관료들은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 시행 여부에 신중을 기하고, 시행 시에도 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조령모개식이나 아니면 말고식의 정책 시행은 국민의 녹을 받는 실무 관료의 태도가 아니다. 작년의 식대 급여화와 같은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는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인들과 같이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정책 시행을 서두른 결과일 것이다. 새로운 의료정책은 의료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해야 하며 의료계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는 의료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분배 우선 정책과 편가르기에 따른 기득권 세력으로 치부되어서 인지 의료계는 일방적으로 허울 좋은 다수결에 의해 제대로 전문가 대접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의견을 반영도 못 시켜 왔다. 그러나 향후 5년 동안의 의료정책 방향에 따라 의료계의 상황은 급변할 수 있기에 의료계가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는 5년 뒤에 이루어지겠지만 그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의사들의 단합되지 않는 모습은 다른 직종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조금 너무하다 싶다. 이제는 모두 단합된 마음으로 근시안적인 이익집단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모습을 갖추어 가야 한다.

지금 의료계는 의료인들이 직접 의료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의료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원하는 '의료 정책 Dream Team'을 조속히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KHA